

■ **현장과 시각** ■

중소기업 힘겨운 겨울나기



이종태

경제부 부장

해가 바뀌어도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우울하다. 고질적인 판매·인력난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초부터 닥쳐온 자금난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CD(양도성 예금증서)와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시작된 은행권의 '돈 가뭄'은 신규대출 중단, 고금리 태풍으로 이어져 중소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추가 설비투자는 커녕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선 업체들도 하나 둘이 아니다. 말 그대로 '잔인한 겨울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 하남산단내 한 기계제조업체는 10여억원의 부품 개발자금 융자신청을 했다가 신규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은행의 설명을 듣고 설비투자를 포기하고 말았다.

소손공단내 한 업체는 "기존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큰 폭으로 올라 직원들 월급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올 초에 임용직 숫자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자,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10~20% 높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을 노크하는 업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수요를 조사한 결과 100개 중 4~5개가 사채로 자금난을 해결했다는 가 하면, 금융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6개에 달한 것만 봐도 자금난은 올해 지역 제조업체의 최대 화두가 될 것 같다.

정부나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을 국가 발전의 '성장엔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자금 지원에 관한 한 중소기업들은 소외되거나 푸대접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물론 중소기업들에 지원되는 자금의 종류가 적은 것은 아니다. 셀 수 없이 많다. 문제는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지원금이 '그림의 떡'이라는 데 있다.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한 사람이라면 담보 없이 1천만원 빌리기도 어렵다는 데 다들 공감한다.

중소기업 살리기의 공은 이제 새 정부로 넘어갔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정말로 명분보다는 실리가 우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임금도 8.3%나 인상돼 중소기업들의 살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금융권의 까다로운 대출 방식을 바꾸는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만들어 지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자금 지원 확대, 법인세 인하, 고용촉진을 위한 정규직 인건비 세액공제 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새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이다.

jtlee@kwangju.co.kr

국정원장 '대화록 유출' 전말과 파장

“여론몰이용 조직적 공작”

인적 청산 등 국정원 대대적 수술 불가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간의 대화록 유출 사건은 결국 새 정부 출범을 한달여 앞두고 정보기관장의 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 왔다. 특히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보기관장이 자신과 '조직안정'을 위해 내부 문건을 주도적으로 유출시킨 점이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 원장은 15일 대화록 유출 경위를 설명하면서 "세간에 불필요한 의혹이 확대 재생산돼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과 동시에 대선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온 조직

의 안정을 위해 주변인사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자신들의 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장의 판단 하에 조직적으로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국정원이 "국정원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모 언론사 간부 및 국정원 퇴직직원 등 14명에게 의혹해소를 위한 설명과 함께 인수위 보고자료(면담록)를 제공했다"고 설명한 대목도 여론 불이를 하기 위한 '비밀공작'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대선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온 조직

서는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는 국가문란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와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김 원장이 대선 하루전 방북한데 대해 의혹과 억측이 나온 상황이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브리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관행처럼 반복돼온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정보기관 특성상 정권교체가 마다 '살생부' 논란을 불러왔던 국정원의 조직 개편 및 인적청산과 관련해 국내 정보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간의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 김만복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내국동 국정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대화록 내용 파악후 수사 여부 결정" 선거구 확정위 주중 구성

검찰은 15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자신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간의 대화록을 스스로 유출했다고 밝히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대화록을 입수해 분석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이날 "검찰은 면담록을 입수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국정원 발표 내용

과 함께 대화록 내용이 사법처리 대상인지, 문건에 '국가기밀' 등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등을 살펴본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안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당연히 인지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금주내로 구성돼 제18대 총선의 선거구 확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부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선관위 등 5개 분야에서 11명 이상을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추천받아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임제정 의장 측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아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각 당과 협의될 것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정권 비리 폭로...김형욱 입 막아라”

한국정부 조직적 개입 드러나

1977년도 외교문서 공개

박정희 정권에서 중앙정보부장을 지내다 미국으로 망명한 김형욱 씨가 1977년 박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자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고소를 제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김 씨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언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15일 공개한 1977년도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7년 6월23일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은 총리공관에서 김형욱 사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했다. 이때는 김 씨가 뉴욕타임스와 미하인 프레이저 청문회를 통해 'DJ 납치사건' 등 박 정권의 비리와 대미공작 등 국가기밀을 폭로한 직후였다.

당시 대책회의의 결과는 ▲박석 조치 사항 ▲김형욱 신병 송환 요구 ▲국회 조사위 구성 ▲청와대 도청문제에 관한 대책 ▲언론대책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법적 조치 사항으로 정부는 6월5일 자 뉴욕 타임스 기사내용과 22

일 미 의회 청문회 발언내용을 중앙정보부의 긴밀한 협조하에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검찰에서 김 씨를 입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김 씨의 발언 내용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 조항 적용범위를 최대한 확대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법적조치(신병인도)는 미국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대리와 주미 대사관 고문 간에 현지 법적 근거와 실정을 파악해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재미 교포 가운데 피해자들도 하여금 김형욱 씨를 상대로 고소(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민형사)를 제기하도록 했다.

이어 김형욱 신병 송환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법적 검토 결과에 의거해 검찰의 요구에 따라 외무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김 씨의 신병 송환을 미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외무부가 김 씨의 송환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공식 문서에는 김 씨의 망명이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는 내용의 문구를 확실히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김 씨의 송환을 미국에 요구하는 사실을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또한 미국 측의 반응도 보도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힐러리 - 오바마 초점전

사우스 캐롤라이나·플로리다 여론조사 일진일퇴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의 판세를 가를 2.5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여전히 초점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14일 조사됐다.

특히 남부지역 표심의 방향타가 될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공화 19일, 민주 26일), 플로리다 프라이머리(29일) 여론조사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오바마가, 플로리다는 힐러리가 각각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라스베이저스 리포트에 따르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오바마는 42%의 지지율로 30%의 지지에 그친 힐러리에 큰 폭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플로리다에서는 힐러리가 48%를 기록, 24%의 오바마를 무려 두 배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드워즈는 14%로 역시 3위에 그쳤다. 아이오와 코커스(3일)와 뉴햄프셔 프

라이머리(8일)에서 각각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던 오바마와 힐러리는 2.5 '슈퍼 화요일'의 전초전 성격을 띤 이들 두 곳에 서도 1대 1의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끝까지 초반빙 대결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뉴햄프셔 승리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유리한 국면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케인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27%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했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24%,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16%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매케인은 플로리다에서도 19%의 지지율로 18%의 지지에 그친 롬니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17%의 허커비를 각각 앞지른 것으로 조사돼 '슈퍼 화요일'에서의 돌풍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오portunidad de negocio

상무지구 후학의 콘서트

밴드피아 7080

중형악기완·악수·악보·악보집
이성금·김민준·김민준

민속악기·전통악기·악보·악보집

김민준·김민준 등 작곡·편곡·연주·악보집

상무지구 밴드피아 오피스를 치며 연주하는 밴드피아

Tel. (062) 381-5542, 382-5542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

소니는 화제를 감동하는 TV를 바쁘게 거부합니다!!

모든사 100%가정용

- W시리즈 40인치만
X3300시리즈 115~20인치 상급형 울트라 슬림패널 부상 출시
X3500시리즈 130인치 상급형 울트라

모든사 100%가정용

- W시리즈 30인치 울트라 TV보상
X3300/3500시리즈 50인치 울트라 TV보상

062) 522-2000